

+ 김영주 ·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미디어법 개정에 거는 과도한 기대

: 미디어법이 우리들의 일자리입니다?



모든 규제는 환경과 기술, 산업적 변화에 조응하여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규제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정당한지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의 규제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2월 16일부터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의 시내버스 70대에 미디어법 개정을 홍보하는 정책광고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 따르면 광고내용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면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 집니다' 라고 한다. 이 광고대로 미디어법 개정으로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나고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정말로 미디어법 개정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지난 1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는 지금도 논쟁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 보고서가 '플랫폼 및 광고시장이 향후 어떤 규모일 때 어떤 취업 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규제완화가 실제로 시장 규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란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완화로 인해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보고서의 주된 전제와 산출근거, 산출방식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공식에 따라 산출함으로써 예측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방송시장성장 예측의 기준이 된 변수 중에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매출성장률이나 광고시장성장률과 같은 과거의 실적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수적인 예측치의 근거로는 일본의 GDP 대비 성장률이, 낙관적인 예측치의 근거로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평균 GDP 대비 성장률이 산출근거로 투입됐다.

미디어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와

같은 외적인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마치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미디어 산업은 현실이 아닌 무중력 상태에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측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일어난다.

모든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예측들은 거의 맞은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의 예가 IPTV 도입시 쏟아져 나왔던 시장창출효과다.

ETRI는 2008년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TV의 생산유발 규모는 8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3만6천명(개국연도 8300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IPTV 3사의 개국연도 고용인원은 222명에 불과하고 사업성도 과다 예측됐다.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DMB의 경우도 위성 DMB, 지상파 DMB 공히 사업허가 이전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으나 현실은 만성적인 누적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규제는 환경과 기술, 산업적 변화에 조응하여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규제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정당한지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의 규제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 개정 에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었던 신문과 대기업의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나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디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규제완화의 부수적 효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입제한 완화 등 방송법 개정을 비롯한 미디어법 개정 문제가 복잡하고 정책적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사업성이나 산업적 효과만을 가지고 규제완화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개정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리나 법 개정 효과에 대한 무모한 예측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접근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완화의 수준과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속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뤄야 할(이미 치루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다.